

“국립대 10개 육성 시 사립대 고립… 대학 특성화 유도해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논쟁
홍대 미대처럼 강점 중심 성장 지원
연내 지방대 경쟁력 강화안 발표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도 도마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국립대 중심의 육성정책이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인하대 공대, 한양대 공대처럼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던 사례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라며 “지역 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대학 육성과 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전현직 총장·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국립대 10개를 육성하겠다고 하면, 사립대 비중이 80%인 현실에서 사립대는 다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국립대에만 치우치면 사립대 고립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에만 6000억~1조원 가까이 지원하면서도 QS(세계대학평가)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모든 대학이 서울대를 따라가는 백화점식 정책을 반복하면 안 된다. 과거 홍익대 미대, 인하대 공대, 한양대 공대처럼 대학별 특성화가 강화됐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이 많이 드는 기초과학은 국립대에서 맡고, 사립대는 특성화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식으로 일률적 확대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최초로 제안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은 단순히 국립대 확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대처럼 지역별로 특성화된 연구 중심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구상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유니콘 정책’으로도 언급되는 만큼, 교육부가 중심이 돼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재 수요에 맞는 전략적 대학 육성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간 통화와 관련한 ‘학폭 무마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장 전 수석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폭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당시 김 여사가 전화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학폭 무마나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틀 뒤, 일면식도 없는 차관에 게 영부인이 전화를 건 것이 정상적인 행위냐”고 질의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국가의 통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은 2023년 7월 경기 소재 A초등학교에서 김 전 비서관의 딸이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 이후, 김 여사가 장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학폭위는 두 달 뒤 열린 회의에서 ‘강제전학’보다 낮은 ‘학급교체’ 처분을 결정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내년도 예산 51.5兆 편성 약자돌봄·일자리 확대 등 민생 집중

‘약자와의 동행’에 8601억 증액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재난 대응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5060억원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 회에 제출한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총 15조6000억원을 투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듬는다. 또 건설된 지 30년 넘는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4500억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 총 22만5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더 민생과 안전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예산안 중 순계예산 규모는 46조547억원(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5조4513억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교육·청·자치구 지원예산 및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조7683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 공공일자리

먼저 ‘약자와의 동행’에 전년 대비 8601억원 증액(5.8% ↑)한 15조 6256억원을 투입한다.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4조7645억원)하고 돌봄SOS(361억원)를 더해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년 대비 383개 늘어난 5500개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주말특화형(야외·가변형), 공원형(실·내외 연계) 등 다각화하고 지난달 기준 3만6000명이 가입한 ‘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울런’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236억원)한다.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4000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 1조622억원을 투자한다.

민생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어 나간다. ▲소상공인 종합지원(311억원) ▲신규 융자 확대(487억원) ▲공공배달서비스 홍보·페이백(35억원)도 확대하고 ‘직접 일자리’를 전년 대비 1만 6000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22만 5234개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 재난 선제적 대응 등

집중호우, 지반침하, 화재 등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복합적이면서도 다변화되는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 안전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건설된 지 30년 넘는 상·하수도관 정비(4477억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

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이고 GPR·현장점검단 운영 등 점검수단을 다각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

GTX-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 ‘AI·이공계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 투자에 집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RISE, 이공계 장학금 3종 세트’로 인재를 양성(1315억원)하고 미래산업 R&D 예산 497억원 중 100억원을 AI 분야에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밝아야 할 빛은 늘리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밝아야 할 빛은 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 추진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설치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문의와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거점으로,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된다.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및 추진 지원 ▲정책 연구·개발 ▲주택공급 및 이주수요 분석 ▲정보제공 및 민원 상담 등 주민 밀착형 현안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정식 개소식은 11월 5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제막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센터 개소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 재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포천시, 소규모 제조업소 기숙사 설치 허용

세부기준 마련해 실효성·안전성 ↑

포천시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연면적 500㎡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도 ‘기숙사(숙소)’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제조업체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해,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는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외

국인 근로자 고용이 막히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천시는 이러한 규제가 3디(D) 산업 기피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검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정책의 법률적·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부속용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소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추후 제조업소의 용도를 음식점 등으로 변경할 경우 속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